

가금산업 ‘수요자 중심 연구’ 추진 농진청, 골든시드 프로젝트(GSP) 연계 국산 종자 개발 확대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 국립축산과학원은 충남 성환 소재 축산자원개발부에서 지난 2월 26일 전문지 기자들을 초청, ‘가금분야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해 성과와 올해 연구 추진 방향과 골든 시드 프로젝트 종자 개발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해 산육능력을 개선한 ‘우리맛닭 2호’, 산란율을 개선한 ‘우리맛닭 3호’를 특허출원, 그리고 토종오리 종자를 개발해 상표출원을 마쳤다. 특히, 토종 가금 10품종을 국제기구(DAD-IS)에 등재해 종자 주권을 확보하는 한편, 골든 시드 프로젝트 연구에도 활용해 국산 종자를 개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형육계의 생산기술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영광 등 3개 지역에 현장실증시험도 추진하고 있다.

오리 산업의 활성화와 오리 사육 농가를 위해 ‘오리 이야기’ 등의 자료를 발간하는 한편, 배합사료 내 항생제 사용금지에 따라 오리의 생산성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미생물제제를 개발했다. 국립축산과학원 가금과는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가금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 43과제의 연구를 추진한다.

특히, 골든시드 프로젝트와 연계 국내 유전자원을 활용한 새품종 닭 종자를 개발해 외국산과 차별화를 추구하는 한편, 국산 종오리 계통 조성을 완료해 1만수 정도 시범 보급할 계획이다.

병아리의 품질개선을 위해 종계·종란 및 부화전·후 종합관리 기술과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폭

염 피해 최소화 육계 사양기술, 닭고기 수출 확대를 위한 고품질 산란 노계육 생산기술 등도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농촌진흥청 가금과 최희철 과장은 “최근 생산과잉 및 소비부진, 사료가격의 인상 등으로 농가들이 힘든 상황이다.”라며 “이러한 여건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수요자 중심의 연구를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라이브뉴스 도나희 기자 2013. 02. 27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온힘’ 청원군, 친환경 사양관리 등 추진

청원군은 지역 내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사양관리, 품질고급화, 가축질병예방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6억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3월 4일 밝혔다.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보급사업은 한·미 FTA 타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축산업 경쟁력 제고와 축산물 전면 수입개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친환경축산 시설·장비는 스타존, 냉각기, 사료자동급여기 등 30여종이며, 축종별 사육여건에 맞는 맞춤형 시설장비 지원이 이뤄지면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 농가는 지역 내 축산업등록농가 중 각각 한우·육우 30마리, 돼지 500마리, 닭 1만 마리, 오리 5천마리 이상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179농가가 최종 선정됐다.

군은 축산농가 가축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군비 4천 만원을 들여 축사 대형 환풍기 200대를 설치함으

로써 여름철 혹서기 고온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충청일보 이능희 기자 2013. 03. 04

나눔축산운동본부 기금 취지 무색 지난해 8억 중 93%가 농축협서 조달

출범 1년여를 맞는 나눔축산운동본부가 전축산인이 함께 참여해 나눔을 행한다는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지난해 모금액 7억9,900여 만원 중 농협중앙회 계열사(5억200만원)와 축협(1억3,600만원), 축산경제 임직원(9,764만원) 등이 7억5,000여 만원을 내 93%를 차지했다. 나머지 축산관련영리법인 2,112만원, 축산관련단체 1,650만원, 축협 소속 축산농가 240만원, 정부·지자체·학계 등 기타 860만원 등 협동조합을 제외한 축산업계가 낸 모금액은 4,862만원에 그쳤다.

본부는 또 올해 기금 조달계획을 15억3,000여 만원으로 잡고 축산관련단체 3,600만원, 축산관련영리법인 1억7,200만원, 축협 3억6,000만원, 농협중앙회 계열사 5억3,100만원, 축산경제직원 1억270만원과 지정목적기부금 3억5,000만원 등을 모금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농협중앙회와 축협이 내는 기금이 전체의 2/3가량은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농협중앙회가 하는 사업이었다”면서 “외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축산경제기획부에 위치한 사무실을 2014년까지 독립운영체제로 전환하고, 사무총장 등 자체직원을 4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어촌신문 이진우 기자 2013. 03. 07

축사 건폐율 60→80%까지 상향조정 무산 농식품부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순회설명회’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이 오는 10월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12일 농협안성교육원 대강당에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순회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10월부터 본격시행 계획

▲언제 본격화 되나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 등이 협의를 통해 마련한 무허가 축사개선대책에 대해 법령 등 제도정비를 오는 9월까지 마치고 10월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주 농식품부 방역관리과 사무관은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소방시설관리법 시행령, 지자체의 건폐율 조례 등을 개정해야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할 수 있다”면서 “9월까지 법 개정과 농가에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의 인허가 관련 절차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가칭 무허가 축사 개선요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인·허가를 통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은 올해 10월부터 2015년까지며, 2016년부터는 무허가축사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가 들어간다.

육계·오리 축사 범위 개선

▲건폐율조정 및 가설건축물 적용확대 효과는

김정주 사무관은 건폐율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21개 용도지역 중에 4개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6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해 봤지만 지자체가 제정·운영하는 조

례를 검토한 결과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가 없거나 20~50%로 하향설정된 경우가 있다”며 “이를 개선하도록 지자체에 지난해 권고를 했고, 상반기 중에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건폐율 운영현황에 따르면 전국 162개 지자체 중 건폐율 60%를 적용하는 지자체는 104개 · 50% 23개 · 40% 2개 · 30% 1개 · 20% 21개 · 미지정 11개 지자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폐율을 20~50%로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경기도 18개 · 충북 2개 · 충남 2개 · 전북 14개 · 전남 2개 · 경남 4개로 지난해 60%로 확대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가설건축물로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자돈용 컨테이너를 포함시키고, 축사용 가설건축물의 벽과 지붕에 합성수지재질인 일명 썬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년마다 존치기간 연장조치를 해야 하며, 축산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는지를 환경부서에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육계와 오리는 바닥에 비닐을 깔고 재입식 때 분뇨를 즉시 처리한 후 왕겨 등을 일정두께 이상 도포한 경우 방추처리 및 처리시설 설치를 면제한다. 김 사무관은 “자돈용 컨테이너의 경우 축종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어린가축용으로 명칭이 변경될 것으로 보이며, 육계와 오리도 바닥에 콘크리트를 하지 않으면 축사로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법률 개정 따라 유예 적용

▲축사거리제한은

축사를 새로 짓고 싶어도 각 지자체가 운용하고 있는 거리제한 조례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 한 상황. 지난해 15개 시도의 180개 시 · 군의 조례를 조사한 결과 157개 시 · 군에서 가축사육제한조례를 제

정해 운영하고 있었으며, 2011년 환경부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을 시 · 군에 하달한 후 한우 224m→234m, 젓소 237m→312m, 돼지 493m→834m, 닭 445m→594m, 오리 453m→601m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공동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가분법 하위 법령 또는 권고안을 개정할 계획이며, 이 연구는 내년엔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신 · 증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현행 축사거리제한조치로 인해 인 · 허가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한 제도 시행 후부터 2년간의 유예기간을 뒤 이 기간 동안 무허가 축사를 적법한 축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 김정주 사무관은 “법률이 개정되는 시점에 따라 유예기간이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와는 별도로 대규모의 축사에 적용되는 소방관련시설 문제는 소방방재청의 협조에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형별 처리방안

무허가 · 미신고 축사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다른 방식으로 처리된다. 전형률 환경부 사무관에 따르면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전에 입지한 경우(18.2%)는 폐쇄 또는 이전명령이 내려지며, 지정 후 입지한 경우(2.6%)는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또 수변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입지한 경우도 폐쇄명령이 내려지며, 국토계획법 및 하천법 등에 따라 용도변경 · 하천점용허가 등을 미이행하거나 그린벨트에 입지한 경우도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단 해당 법에서 입지가 허용될 경우 추진된다. 건폐율과 용적을 위반인 경우는 건폐율 완화 조치 후 추진되며, 가장 많은 허가 · 신고 미이행과 불법 가설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한 후 가설건축

물 등재 후 추인한다.

이행강제금 감면도 불가

▲왜 빠졌나

건폐율 상향조정과 이행강제금 감면은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국토부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당초 농식품부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을 현행 60%에서 80%로 확대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무허가 축사 입지개선을 위한 건폐율 상향조정 또는 예외 적용은 국토계획법 제정의 취지에 배치되고 다른 건축물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적용 유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행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또는 벌칙을 한시적으로 경감 또는 유예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부과나 벌칙의 적용을 유예하는 것은 사실상 양성화를 하는 것으로 안전문제, 역민원, 위반축사 증가 등의 사회문제가 될 여지가 크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이행강제금 규모는 시가표준액×위반면적×100분의 50이며, 벌칙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김정주 사무관은 “이행강제금이 어느정도 규모가 될 지는 아직 모른다”면서 “무허가 축사 대책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6월까지 마련해 이후 세부적인 교육을 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2013. 03. 18

오리협 충북도지회 정총 개최 충북농가 의무자조금 도입 적극 동참 결의

한국오리협회 충북도지회(지회장 정기헌)는 지난 3월 13일 맹동면 사무소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오리협회 이창호 회장을 비롯해 충북도 유희연 계장 등 회원 8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충북오리농가들은 올해 의무자조금 출범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적극 동참키로 했다.

아울러 무허가축사 문제를 비롯해 축산업등록제 등으로 인해 오리업계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이날 정기헌 지회장은 “오리 의무자조금을 조속히 도입해 자조금을 통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축산신문 최종인 기자 2013. 03. 18

축산계열화법 시행 한 달, 후속조치 ‘미적’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축산계열화법)이 시행된 지 한 달 가까이 되고 있지만, 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시행규칙이 최종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의 처리와 맞물리면서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계열화사업의 총체적인 운영 계획 등도 아직 수립되지 않아 법 시행에 있어 후속 작업들이 속히 마무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3월 14일 “현재 시행규칙이 법제처 심사 중에 있는데, 정부조직법 문제 때문에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농식품부 등 부처 명칭 변경이 확정돼야 여기에 맞춰 시행규칙 내용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22일 법 제정 이후 올해 2월 23일 시행 전까지 1년여 동안 양계업계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이뤄져 왔고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시행규칙이 마련됐지만, 정치적 문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하지만 시행 규칙과는 별도로 축산계열화 법 시행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과 운영 방향 등도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법 제4조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은 ‘계열화사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상황에선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것이 급선무”라며 “그 다음에 고시로 정할 수 있는 원자재 품질 출하 가축 품질, 사육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업계에서 의견이 나오면 고시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한 뒤 후속 논의 일정을 잡을 계획이며,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선 관련 단체에 조정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얘기를 전했다”고 말했다.

축산계열화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양계업계는 하루빨리 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흥재 양계협회 육계분과위원장은 “법 시행이 됐는데, 시행규칙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세부 사항에 대한 정리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협회 분과위에서 계열화법과 관련해 농가

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의견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계업계 한 관계자는 “축산계열화 법이 시행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마무리돼야 할 사항이 있다”며 “농가와 계열업체의 상생이라는 법의 취지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업계가 충분한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2013. 03. 18

가래 식혀주고 염증 막아주고... 오리알의 재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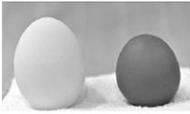
불포화 지방산 함량, 달걀의 2배

‘낙동강 오리알’이란 말이 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거나 홀로 소외돼 처량하게 된 신세를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요즘 ‘진짜 오리알’ 신세가 바로 그렇다.

마을의 작은 상점이건, 대형마트건, 백화점이건 널린 것이 달걀이지만 오리알은 눈 씻고 봐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아무도 오리알의 근황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는다. ‘오리알이 당뇨에 효과가 있다’는 민간요법에 근거해 얼마 전부터 찾는 이들이 종종 있다는 얘기만 떠돌 뿐이다. 이처럼 오리알 신세가 처량 맞아도 영양가는 오히려 달걀보다 높으면 높지, 결코 낮지 않다.

우선 칼슘이나 철, 마그네슘, 인, 칼륨 등 무기질 성분이 달걀보다 풍부하다. 또 비타민A나 비타민B군 등의 함량도 달걀보다 많다. (표 참조) 한방에서

**오리알·달걀
영양소 비교**
(100g당 함유량)



구분	오리알	달걀
수분	70.83g	76.15g
에너지	185kcal	143kcal
단백질	12.81g	12.56g
지방	13.77g	9.51g
탄수화물	1.45g	0.72g
칼슘	64mg	56mg
철	3.85mg	1.75mg
마그네슘	17mg	12mg
인	220mg	198mg
칼륨	222mg	138mg
나트륨	146mg	142mg
아연	1.41mg	1.29mg
비타민B1(티아민)	0.156mg	0.040mg
비타민B2(리보플라빈)	0.404mg	0.457mg
비타민B3(니아신)	0.200mg	0.075mg
비타민B6	0.250mg	0.170mg
엽산	80μg	47μg
비타민B12	5.40μg	0.89μg
비타민A	194μg	160μg
포화지방산	3.681g	3.126g
단일불포화지방산	6.525g	3.658g
다불포화지방산	1.223g	1.911g

자료: USDA

어린이들 대부분이 비타민A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리알에 풍부한 불포화지방산 역시 염증을 촉진하는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을 억제해 기관지염 등의 항염작용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오리알에는 올리브유에 많이 들어 있는 단일불포화지방산이 달걀에 2배 가까이 들어 있다. 오리알은 오리고기보다도 불포화지방산 함유량이 높아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오리알에서 주목할 성분으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비타민B12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비타민B12의 권장섭취량은 2.4μg/일이다. 그런데 오리알 100g에 들어 있는 비타민B12 함량은 5.40μg으로 달걀(0.89μg)

의 무려 6배 정도에 이른다. 비타민B12는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악성빈혈 예방과 뇌의 노화 등으로 인한 치매를 방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타민이다. 비타민B12는 적혈구를 만들고, 아미노산 중간대사 부산물로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과 같은 작용을 하는 호모시스테인의 혈중 농도도 감소시킨다. 비타민B12는 미생물과 동물성 식품에만 있기 때문에 채식주의자는 별도의 보충제로 섭취해줄 필요가 있다. 또 오리알은 엽산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엽산은 임신부 및 수유부 여성에게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다.

엽산은 뇌기능이 원활히 활동하는 데 중요한 성분으로 체내에 부족하면 우울증, 인지능력 감소증과 같은 신경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한편 오리알은 피부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 등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들에게도 유익한 것으로 한 연구 결과 밝혀졌다. 지난 2002년 9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연세대 의과대학 소아알레르기클리닉에 내원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피부시험 및 계란에 대한 특이 면역반응을 측정된 결과, 달걀 알레르기로 확인된 환아들이 달걀 및 메추리알에서는 강한 면역반응을 보였으나, 거위알, 오리알 및 청둥오리알에서는 약한 반응을 보였다. 당시 연구진은 달걀 알레르기 환아들에게 오리알이 대체식으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리알에 많이 들어 있는 비타민A는 호흡기와 위장관 점막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해 유해한 미생물이 체내로 침입하는 것을 막아준다. 이는 비타민A가 백혈구의 생성을 돕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호흡기 감염 등 바이러스에 취약한 제3세계

에 취약한 제3세계 어린이들 대부분이 비타민A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리알에 풍부한 불포화지방산 역시 염증을 촉진하는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을 억제해 기관지염 등의 항염작용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오리알은 판매하고 있는 곳을 찾기도 어려우며 찾는 소비자도 많지 않다. 또 국내 오리산업은 알보다는 육류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오리알을 낳는 산란전용 오리의 보급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서울 경동시장 등 일부 전통시장을 찾아가면 오히려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리알이다. 경동시장에선 달걀보다 1.3배 정도 큰 오리알이 한 알당 300~500원에 팔리고 있다. 대개 프

라이나 짬 등의 용도로 많이 팔려 나간다고 한다.

문화일보 이경택 기자 2013. 03. 20

전남도 축산연구소 전남 오리 산업 경쟁력 강화 세미나 개최

고품질 오리고기 생산 및 오리 질병관리 요령 등 기술 전수



지난 3월 20(수)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민수)에서는 한·미 FTA 등 수입개방에 대비 오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립축산과학원 김지혁 박사 등을 초빙하여 ‘고품질 오리고기 생산기술 및 가축 방역관리 요령’에 대해 전남 오리협회 소속 회원농가 120여명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현재 오리산업의 현안사항인 신제품 종자오리 사양기술, 오리 산업화 지원기술, 사료영양 및 부존자원 이용기술, 고품질 및 기능성 오리 생산기술, 오리전용 항생제 대체물질 개발 및 효율성 증진 기술 등을 국립축산과학원 김지혁 박사가 제시하였으며, 이어서 도 축산위생사업소 임종수 연구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도내 유입차단을 위해 매주 1회 이상 농장소독, 야생조류 차단 그물망 설치,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 농장주 철새 도래지 출입자제 등 농가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AI 의심 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 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오리산업은 11년도 농림생산액 13,966억원으로 농림업 상위 10개 품목 중 당당히 7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액도 전년대비 약 7%가 증가, 지속적인 성장추세에 있어 유망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남의 오리 사육두수는 489만수로 전국 1위(1,116만수의 44%)를 점유하고 있으며, 고품질의 오리사육 기술개발과 함께 친환경적인 사육기반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 김원호 소장은 “깨끗하고 청정한 오리고기 생산을 위한 사육환경 개선, 약취저감 그리고 사료비 절감 등의 기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친환경적인 오리사육기반 구축을 위해 선진기술과 정보를 축산농가에 제공하여 오리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티 박동교 국장 2013. 03. 23

친환경축산 시범단지 5곳 조성

농식품부, 대통령 업무보고로 본 주요 축산 정책

축산업을 지속가능한 친환경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이 강도 높게 추진된다. 복잡한 축산물 유통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한 협동조합형 패커도 적극 육성된다. 새정부의 주요 축산정책 방향을 알아본다.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새정부는 가축분뇨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가축분뇨를 고품질 퇴·액비로 처리해 경종 농가에게 공급하고 에너지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동자원화시설은 지난해 88개소에서 올해 101개소로 확대해 2017년까지 150개소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에너지화시설도 지난해 7개에서 올해 9개소로, 액비유통센터는 지난해 162개에서 올해 177개소, 2017년에는 222개소까지 각각 늘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9.1%에 그치고 있는 공동자원화율을 2013년 11.9%, 2017년 17.2%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4월에는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가축분뇨 자원화 중장기 대책을 세운다. 무허가축사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와 시설현대화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2월 마련된 무허가축사 개선방안에 대한 관련법령(건축법·가축분뇨법 하위법령 등)은 9월까지 개정한다. 생산성 및 품질향상·동물복지 등을 위해 지원되는 축사시설현대화자금은 지난해 3,880억 원에서 올해 4,325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축산농가 경영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료가격 안정대책은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사료업체의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춘다.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사료 직거래구매자금 및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며, 사료업체에는 구입원료에 대해 할당관세 운용 및 원료구매자금을 지원해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축산농가들의 숙원사항 중 하나였던 축산단지화 사업도 시범 추진한다. 우선 올해 5개소의 균유지와 간척지 등에 개소당 10ha 이상의 지역단위 친환경 축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국유림을 활용한 산지 축산 도입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불합리한 축산물 유통구조는 협동조합형 대형 패커 육성을 통해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농가는 생산에 전념하고 지역축협은 수집·공급하며 농협중앙회는 도축·가공·유통·판매를 전담하는 협동조합형 패커를 적극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11% 수준인 안심축산 한우 시장 점유율을 올해 18.6%, 2016년에는 37.1%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거점도축장도 지난해 11개소에서 2015년에는 20개소까지 늘려 위생수준을 높여 나가는 한편 도축·가공·유통을 연계한 통합경영체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합리적인 소비자 가격을 유도하고, 산지와 소비지 가격 연동성을 높이기 위해 농협계통 정육점 및 정육점 식당도 대폭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2년 297개소인 농협계통 정육점을 올해 370개소, 2017년 1,000개소로 대폭 늘리고, 정육점식당도 2012년 269개소에서 올해 300개소, 2017년에는 600개소까지 늘릴 방침이다.

◆가축질병 대응

2014년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 회복 및 조류 인플루엔자(AI) 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한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한다. 매주 수요일을 축산시설 일제소독의 날로 운용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지역담당관, 농협 공동방제단 등을 통해 소독·예찰 및 백신접종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효율적인 방역여건 조성을 위한 축산업허가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올 12월에는 돼지이력제 및 농장별 질병관리등급제(시범사업)를 도입할 계획이다.

농민신문 성흥기 기자 2013. 03. 25

**국내 청둥오리 66%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경험**

야생조류 감염실태 조사...혈액 379건 중
249건 항체 검출

우리나라의 대표적 겨울철새인 청둥오리 세 마리 가운데 두 마리는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국내 야생조류의 분변과 사체·혈액 등을 토대로 종별 AI 감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둥오리의 혈액 시료 379건 가운데 65.7%인 249건에서 AI 항체가 검출됐다고 지난 2월 26일 밝혔다.

혈액에 항체가 형성된 경우 과거 AI에 감염됐거나 현재 감염된 상태라는 뜻이다. 이 가운데 가끔류에 전파되면 고병원성으로 전이할 우려가 있는 H5 유형은 4건이었다. 고방오리도 157건 가운데 100건(63.7%)으로 항체가 많이 검출됐다. 철새 20종 전체를 보면 891건 가운데 440건에서 항체가 검출돼 절반 정도가 AI 감염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항원은 전체 혈액 시료 1천1건 가운데 16건에서 검출됐다. 분변에서는 전체 9천927건 가운데 5.1%인 506건에서 항원이 나왔다. 이 가운데 14건은 고병원성으로 전이 가능성이 있는 유형이었다.

그러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어느 시료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AI 감염률이 가장 높은 청둥오리에서 H5 유형의 항원이 4건이나 검출됐다”며 “항체 형성 비율이 높다는 것은 현재 감염 상태가 아니더라도 집단 내에 바이러스가 계속 돌고 있다는 뜻이어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없어**

지난해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 HPAI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3년 만이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월 27일,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겨울철새, 여름철새, 통과철새 등을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를 사계절 상시적으로 예찰한 결과, HP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주요 철새도래지와 과거 HPAI 발생지 인근의 철새도래지 등을 중심으로 청둥오리 등 야생조류 20종 1,001개체를 포획하고 분변 9,927점과 사체 200점을 수집해 야생조류의 시기별, 지역별, 종별 AI 감염실태(항원, 항체검사)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포획조사 결과, 겨울철새인 고방오리, 쇠기러기, 쇠오리, 원앙,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흰뺨검둥오리 등 7종과 통과철새인 뒷부리도요, 청다리도요 2종에서 AI 감염(항원, 항체)이 확인됐다. 19종 891개체의 혈액 내 AI 항체 검사결과로는 440개체(49.4%)에서 AI 항체가 확인됐으며, 그 중에서도 청둥오리 65.7%, 고방오리 63.7%, 쇠오리 40.5%, 흰뺨검둥오리 40% 등의 감염율이 높았다. 특히 AI 감염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된 청둥오리는 고병원성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H5 유형도 4건이나 검출되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9,927건의 야생조류 분변 조사 결과, H5형 9건, H7형 5건을 포함해 모두 506건(5.1%)에서 저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과학원 관계자는 “앞

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2013. 02. 26

으로도 조류인플루엔자 사계절 상시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가금과 야생조류의 AI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라며 "포획조사, 분변, 폐사체 등 다양한 야생조류 AI 모니터링 방법을 검토해 AI 조기 감지와 야생조류 보호에 가장 적합한 환경친화적인 방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2013. 02. 27

토종 박사, 조류인플루엔자 치료백신 개발 타미플루 대체 약물 '화제'

한 토종 과학자가 조류인플루엔자 치료백신인 타미플루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항인플루엔자 치료제를 개발, 화제다.

주인공은 진주의 경상대 환경생명화학과 출신으로 현재 농촌진흥청 연구원으로 근무 중인 김진호(37) 박사. 김 박사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아래 캐나다 워더스 박사팀과 공동으로 항인플루엔자제 연구에 나서 차세대 항인플루엔자 치료제인 시알릭산(인체와 바이러스 세포 표면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당의 일종) 유도체를 찾아냈다.

김 박사의 연구결과는 최근 '사이언스 익스프레스' 온라인판에 '광범위 인플루엔자 치료 기능을 갖는 공유결합형 뉴라미니데이즈 억제물질'이라는 논문명으로 게재됐다.

김 박사팀이 개발한 인플루엔자 치료제는 당의 일종인 시알릭산의 분자구조를 변형시켜 만든 약물로서, 기존 치료제와는 달리 뉴라미니데이즈의 핵심 부위에 강력히 결합해 활성을 억제하도록 설계

해, 기존 치료제 내성바이러스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실험실 상에서 작용메커니즘과 효능을 검증했을 뿐만 아니라, 인플루엔자 감염동물에서도 시험 평가해 차세대 항인플루엔자제 개발을 완성했다.

김 박사는 "이 치료제는 현재 약 35억 달러 수준의 인플루엔자 치료제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지난 2012년 미국 특허 취득에 이어 현재 유럽과 중국에도 특허 출원 중"이라고 밝혔다.

김 박사는 지난 2009년 3월 캐나다에서 귀국, 현재 농촌진흥청 화학물질안전과에서 천연물을 활용한 새로운 친환경 농업 소재 개발 연구를 수행 중이다.

부산일보 이선규 기자 2013. 03. 04

파주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협의회 개최

파주시는 최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계속적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고 남방지역 철새들의 이동시기인 봄철을 맞아 지난 2월 28일 각 읍·면 산업팀장과 방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역협의회를 통해 각 읍·면을 중심으로 관·민이 합심하여 조류인플루엔자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앞으로 소독 미이행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벌을 통해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시는 가금 농가의 예방백신 지원비 1억2,000만원을 편성하여 농가에 큰 피해를 일으키는 가축전염병의 사전 예방을 지원하고 있다.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농가 및 가금밀집지역과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광역방제기와 소독차량을 동원하여 매일

소독을 지원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대비가 절실하다며 이 기간에 가금사육농가의 자율방역을 독려하기 위하여 농가에서 사용하는 소독약품에 대해서도 예산을 지원하여 자율적으로 방역을 시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매일 신민하 기자 2013. 03. 04

전북지역 오리농장 16곳서 저병원성 AI 검출

전북지역 오리농장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됐다. 전북도 축산위생연구소는 2월 18일부터 도내 150여 개 오리농장을 대상으로 AI 검사를 실시한 결과 남원 8곳, 정읍 3곳, 김제·임실·고창·부안·무주 1곳씩 총 16곳의 농장에서 저병원성 AI가 검출됐다고 지난 3월 13일 밝혔다. 축산위생연구소는 이번에 검출된 AI가 고병원성은 아니지만 AI 바이러스의 특성상 저병원성이 고병원성으로 변이가 가능해 축산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병원성 AI는 급성 조류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2010년과 2011년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닭과 오리 등 대규모 매몰이 이뤄졌다. 축산위생연구소 관계자는 “AI 검출 농장을 대상으로 소독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서 “앞으로 AI 병원체 잠복 가능성이 높은 오리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종계·산란계 및 토종닭 등에 대해서도 연중 AI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1 김춘상 기자 2013. 03. 13

“AI 막아라” 철새 10마리 위치추적기 달고 임무 수행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국내 유입을 감시하기 위해 제주

도를 경유하는 철새에 위치추적기가 달렸다. 제주 자치도는 제주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과 (주)한국환경생태연구소가 주관해 한경면 용수 저수지의 야생조수(철새)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했다고 지난 3월 17일 밝혔다. 3월 12일~13일 전담조사팀이 한경 용수 저수지에서 철새 10마리를 포획한 뒤 추적기를 부착하고 풀어줬다.

추적기를 통해 철새의 국내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철새의 군집, 종류, 수량, 생활범위 등 조류생태 조사도 병행된다. 제주도는 “이번조사를 통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를 사전예방 하기 위한 주요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제주도는 필요한 경우,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로 철새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할 계획이다. 한편, AI 의심 가축 발견 시, 신고 번호는 1588-4060 이다.

시사제주 고통명 기자 2013. 03. 17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고병원성 AI 방역강화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허창현)는

가금사육농가에도 야생조류에 의한 AI가 유입될 수 있다고 판단해 고병원성 AI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난 3월 17일 밝혔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해 12월과 이어 1월 한경 용수 및 구좌 하도 철새도래지에서 H5형 및 H7형 저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행정시와 합동으로 철새도래지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상 증상을 보이는 야생조류 또는 폐사된 개체 등에 대한 임상예찰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철새도래지 인근 가금사육농가에 대한 AI 검사를 강화하는 등 고병원성 AI의 도내 유입 여부를 조기 파악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가금사육농가는 농장 출입구의 상시 차단, 축사내외부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는 등의 철저한 차단방역과, 축사외부 그물망 설치 등 야생조류에 의한 AI 유입차단에 철저히 나설 것을 당부했다.

뉴시스 강정만 기자 2013. 03. 17

청원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면역증강제 지원

충북 청원군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면역 증강제 지원에 나선다고 지난 3월 21일 밝혔다.

군은 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육계 17호, 토종계 1호, 오리 11호 등 29호에 대해 면역증강제 1만3,000kg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농장여건에 맞는 제품을 농가가 구입

해 사료 1ton당 1~2kg을 혼합·급여하는 방식으로 3월 말부터 추진되었다. 군은 지원 제품이 약용버섯과 인삼사포닌, 발효크로렐라, β -글루칸 등의 성분 함유로 가금류 면역증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지원되는 면역증강제는 조류 인플루엔자 뿐만 아니라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물질”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김용빈 기자 2013. 03. 21

경기북부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방역체계 운영

경기북부축산위생연구소는 철새도래지와 가금사육농가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방역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3월 21일 밝혔다.

경기북부는 3월에 북방 철새가 회귀하면서 잠시 머무는 중간 기착지인데다 3~5월에는 남방 철새가 도래하는 곳이어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의 고삐를 늦출 수가 없다.

이에 따라 연구소가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검사 255건, 오리 사육농가 검사 1,360건 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조류인플루엔자 음성으로 나타났다.

연구소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막기 위해 도계장, 가금운반차량, 가금사육농장, 가금판매 재래시장 등에 대한 방역과 검사를 강화하고 농가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김철호 기자 2013. 03. 21